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1987년 민주화 이후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은 임기 5년의 단임제다. 그럼에도 국민은 같은 정당 또는 집권 세력의 대통령을 연이어 뽑아 주었다. 그 결과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보수-진보가 10년을 주기로 집권했다. 즉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헌법상으로는 5년 단임제이지만, 국민은 같은 정당이나 진영의 대통령 중임제를 자리잡게 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 중임제에서 연임에 실패한 것이다. 실패 원인은 명확하다. 선거 후 승자에게서 승리 요인을, 패자에게서 패인을 찾고 있지만 이번 대선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다. 한길리서치의 대선 직후 3월 12~14일 조사에서 이번 대선에 대한 총평을 묻는 결과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나 선거 전략이 앞서서 이겼다'가 6.7%, 상대인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나 선거 전략 실패로 이겼다'는 14.6%에 불과했다. 반면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는 평가가 48.7%로 두 후보 승패 요인을 합한 수치의 두 배보다 많았다. 즉 국민은 윤석열-이재명 두 후보보다

대통령 국민 중임제의 종언

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투표한 측면이 크다. 이는 대선 패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서도 더 명확히 드러난다. 이 질문에 대해 '책임이 있다'가 72.8%로 '책임이 없다'는 평가 24.6%보다 세 배가량 더 많았다. 대체로 대선과 총선의 성격을 규정할 때 총선은 대통령 임기 중후반에 치러질 경우 정권 심판론이었으며, 대선은 미래에 대한 선거였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달랐다. 미래 국정에 대한 비전이나 공약보다는 과거 회귀 성격의 정권 심판이 선거 기간 내 일관되었으며, 그 예 따라 정권 심판에 찬성하는 진영을 중심으로 한 후보 단일화와 세대 연대로 지금까지 지 수 없었던 치열한 양자 대결 구도를 보였다. 문제는 그런 와중에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공약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번 대선 내내 정권 교체 논쟁과 후보 연대 등 정략만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자질이나 도덕적 공격에 집중했다. 그러나 보니 각 후보들의 국정 비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되었고, 공약 중에서 옥석이 가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완성도와 국민적 공감대도 확보하지 못했다. 역대 대선도 마찬가지다. 일단 선거에서 승리하면 폐기 또는 수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공약도 국민이 추진한 것으로 간주하여 새 정부의 정책으로 바뀌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였다. 물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앞서 인수위원회가 있지만 인수위원회도 대선 승리의 낙관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없었으니 당선인의 의중이나 집권 세력의 정체성 차원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국민 공감도가 낮고 정권의 정체성에 맞춰진 공약을 새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믿고 나가다 보니 그것이 되레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청산 과제가 많았던 김영삼 정부나 IMF 직후 김대중 정부와는 달리 그 후 정부는 과거 청산 과제나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럼에도 이후 정권들은 과거 심판에 몰두한 대표 정책에 집착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기록권 청산, 행정수도 이전과 주한 미군 철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냉혹한 신자유주의 경쟁 정책 강행, 박근혜 정부의 노인 복지 공약 고수로 인한 미래 세대 소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이 그들이다. 윤석열 당선인측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으로 출범도 하기 전에 신구 정부간 대결의 높으로 빠져 들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당선인 신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가 40%대라는 사상 초유의 여론조사도 발표되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국민의 후보 지지를 공약에 대한 추진으로 바서는 안된다. 그러기에 당선인의 공약이라 해도 정책적 검토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 심판으로 물러나는 전 대통령과 정권 심판에 힘입어 들어서는 새 대통령의 지지율이 같아질 수 있다. 국민이 왜 30년 동안 허용해 오던 국민 중임제 관행을 거두어들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국익 중심 정책과 국민의 민심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을 믿고 나가면 정권 초 국민과 신정부의 허니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정권 말 국민 중임제로 보여준 국민의 관용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社說

지역 차별 행보 인수위 호남도 배려해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이하 인수위)의 초반 행보와 관련하여 "국민이 어디에 살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힌 점과 배치된다. 특히 인수위 구성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파견한 직원들 가운데 호남 출신 5급 이하 공직자들이 갑자기 복귀하게 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인수위는 오는 5월 초까지 새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국정 과제를 설정하게 되는 만큼 지자체들은 여기에 지역 현안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지자체에 대한 차별 없는 기회 부여와 의견 수렴이 중요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따라서 윤 당선인은 특정 지역에 치우친 행보를 접고 국가 균형 발전의 큰 틀에서 낙후된 호남을 적극 배려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한 호남 지역의 현안 사업과 인재들을 적극 챙김으로써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확진자 안타까운 죽음 대신 없도록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중증 장애인이 제때 입원 치료조차 받아 보이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중증 장애인 확진자 치료에 대한 기본적 메뉴얼이 없는 허술한 방역 체계 탓에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시 남구에 사는 중증 장애인 A(여·48)씨는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희귀 난치성 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던 A씨는 함께 확진된 가족들보다 상태가 빠르게 악화됐다. 이에 A씨 남편은 남구보건소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남구보건소는 광주시에 병상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 광주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96.4%, 준중증 병상은 89.8%에 달할 정도로 포화 상태였다. 광주시는 중증 장애인으로서는 이들을 병상을 배정하기 어려웠고, 비교적 여유가 있던 준중증 환자 병상은 A씨의 치료를 맡을 의료기관이 없어 입원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7일 새벽 증세가 크게 악화돼 전남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패혈증으로 숨졌다. 방역 당국은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인 파스르비드 처방 요구도 거절했다고 한다. 이 같은 비극은 현재 병상이 확진자의 장애 유무와는 상관없이 운영 중인데서 비롯되고 있다.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집중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장애인단체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광주시는 그제야 중증 장애인 전용 병상을 확보하고 확진될 경우 병상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대응책을 내놓았다. '뒤틀린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방역 당국은 장애인 확진자의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체계적인 치료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참 지났지만 주변에는 아직도 텔레비전을 켜기가 싫고 신문을 보기가 두렵다는 사람들이 많다. 사적 모임에서도 정치 관련 이야기는 금기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지지한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패배한 선거 결과가 가져온 집단 트라우마, 상실감과 허탈함을 넘어서 또 하나의 감정이 뉴스를 외면하는 상황까지 이어진 것 같다. 이들은 묻는다. "우리 사회 발전하는 결과? 아니, 애초에 사회가 발전한다 생각 자체가 옳은 것일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공직이든 사적이든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짜장면이나 짬뽕이냐"의 사소한 선택도 있고, 미래를 결정할 운명적인 선택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지 선택 사항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주장도 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를 통합해 해소하는 과정을 "변증법" 이론으로 정리했다. 헤겔의 변증법은 진리에 이르기 위한 방

종교칼럼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세례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내 탁자 위에는 항상 문방사우가 놓여져 있다.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께서 호되게 가르침을 받아서인건 긴 시간을 치워 두었다가도 다시금 꺼내 놓기를 40년째 반복하고 있다. 맑은 물을 연적에 담아 베틀에 쏟아 놓고 먹을 가지런히 잡고 뺑뺑뺑 원을 그리며 간다. 서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먹물의 농도는 점점 짙어지고 그윽한 향기가 코를 자극하기 시작할 즈음 화선지를 아주 정갈하게 옹 위에 펴 놓고 문진으로 고정시키고는 붓을 들어 먹물을 머금게 한다. 축을 세우듯 먹물을 머금은 붓을 쓱쓱 베틀에 쓰다듬어 그 끝을 모으고 드디어 화선지에 글을 쓰기 시작한다. 이보다 정신을 집중한 적이 있을까 싶은 정도로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한 획 또 한 획을 써 내려간다. 원하는 문장을 완성했을 때의 그 기쁨은 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었다 싶다가도 붓끝을 쓸 때 몇 가지 낭패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정성스럽게 글을 다 써 놓고 붓을 베틀에 비스듬히 놓았는데 그만 붓이 때구루루 굴러서 화선지 위를

그저 한 점일 뿐이다

스치며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먹물의 농도가 적당하지 않아 글씨가 번져 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자세를 잡고 붓을 들었는데 먹물을 너무 많이 머금은 나머지 툇 하고 먹물 방울이 화선지 위에 떨어져 본 적도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버렸다'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화선지 위에 먹물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 방울이 크지 않고 희을 그어서 감출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조금 확대 해석해 보면 아무리 큰 먹물 방울이 화선지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줄기가 크고 큰 글자를 쓰게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 한 점을 너무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 얼마 전에도 설교하면서 흰 종이에 검은 점을 찍어 놓고 교인들에게 무엇이 보이는가 하고 물었더니 점이 보인다고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했다. 넓디 넓은 흰 종이 보이거니와 보이는 검은 점에 우리 시야를 모두 빼앗겨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급한 나머지 먹물을 쏟아 붓는다고 글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다 기쁨이 있고 화가 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이가 크면 그 위에 떨어진 먹물은 그저 작은 점에 불과할 뿐이다. 마음을 넓고 크게 가졌으면 좋겠다. 과일을 먹을 때 좋은 것부터 골라 먹느냐 나쁜 것부터 골라 먹느냐를 가지고 다투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나중에 먹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것부터 골라 먹는 사람도 있다. 쉽게 생각하면 후자의 경우가 처음에 좋은 과일을 먹으니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전자의 경우 처

음엔 좋지 못한 것을 먹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후자의 경우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먹는 기쁨은 있지만 사실은 계속 더 나쁜 것을 먹게 된다는 단점도 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그 문제의 눈이 문제이지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팔장난 같이 보이지만 작은 문제를 너무 과하게 여기며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 하는데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심로 당대의 스승이요 선지자로 칭송을 받았다. 그런데 뒤에 나타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점점 인기가 올라 갔다. 세례 요한의 제자는 이런 일들이 싫었고 시기심에 스승에게 물음을 던진다. 그런데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나는 굽혀 그(예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마가복음 1:7)라고 말하며 자기를 낮추었다.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마태복음 11:11)라고 평가했다. 우리에게도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이 가장 큰 것 같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과를 친히 당신의 보혈로 덮어 주셨던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허물보다 큰 것이 아닐까 싶다.

기 고

문제는 복합쇼핑몰이 아니다



박송규
조선대 법학과 3년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은 역대 대통령 선거 중 보수 정당이 가장 많은 표를 켰다. 이러한 득표율은 20대 청년에서 두드러졌다. 실제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지 모르지만, 단언컨대 광주 지역과 관련해서 정치권·연론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쟁점은 양당의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이었다. 원래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기 위해선 지자체장의 인허가를 비롯한 각 협의체와 조율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으로 내세운 데는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런 탓에 분열과 갈등을 획책한 공약이라며 사방에서 비난을 받아야 했지만, 이미 다른 도시들과는 뚜렷하게 비교할 정도로 인프라의 차이가 벌어진 광주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생과 연대를 중요시하는 광주시민들이라고 해도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뒤처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후보의 공약엔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언정 복합쇼핑몰 유치를 바라는 시민의 소망마저도 광주 정신 위배를 운운하며 비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시민들의 입장에선, 이슈가 선정될 때까지 사업을 방지하고 무산시킨 쪽에 책임을 묻고 싶을지도 모른다. 결국 복합쇼핑몰 유치 사업이 지난 수년 간 얼마나 지지부진했는지, 호남이 타 지역에 비해 인프라 면에서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꼴이 되면서 역풍을 맞는 결과를 낳았다. 선거가 끝난 뒤 이웅섭 광주시장은 복수의 업체와 쇼핑몰 유치에 대해 타진 중임을 발표했는데, 불과 한 달 전 민주당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며 보도자료를 낸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하다. 다만 이 지경이 되도록 일처리를 게을리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반(反)기업 여론에만 휩쓸려 어디서부터 무엇을 놓고도 있었는지를 지적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광주에 복합쇼핑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는 시대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탓에 끝내 자기당착에 빠져버린 낡은 정치의 문제다. 5일장이나 재래시장이면 충분하다거나 광

천동 유스퀘어를 두고 이미 복합쇼핑몰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구태 정치인들의 주장은 한술 더 뜬다. 복합쇼핑몰 이슈는 이들의 실재를 여과 없이 드러낸 낡은 정치의 편리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이젠 코로나 장기화와 유통업계의 변화로 청년층의 온라인 쇼핑이 대세를 이룬다는데,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고 있기 때문인데 어느 쪽이든 개탄스럽긴 마찬가지다. 차기 정부가 눈여겨봐야 할 문제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들의 지방 이탈 현상이다. 광주와 호남은 물론 전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이유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크고 문화 혜택 부족에 따른 탓도 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면,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실제로 광주는 복합쇼핑몰만 없는 게 아니라 위탁시설과 체인점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에서 정치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은 많은데, 우리 정치는 광주에 복합쇼핑몰을 짓느냐 마느냐에서부터 정체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이슈가 또다시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이라도 미래 광주를 위한 보다 더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발행인 김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국회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남 본 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